
코로나19와 성소수자

혐오, 낙인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배경 – 이태원 지역 집단감염

- **한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 2월 중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
- 3.22. – 5. 5.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 5. 7. 이태원 지역 클럽에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 알려짐
- 이후 이태원 지역 방문자,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
- 현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 계속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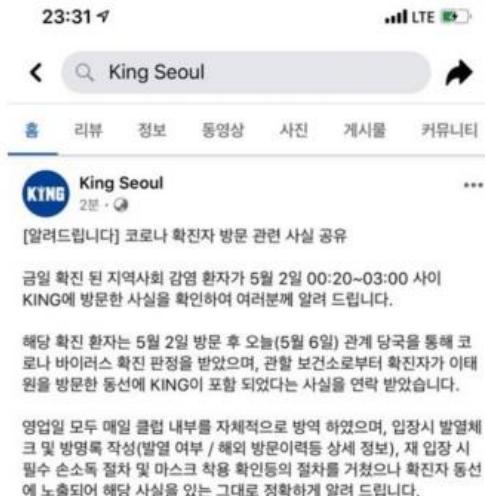
배경 – 성소수자 혐오와 낙인

시사 > 전체기사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클럽 세곳 2000여명 방문 지역사회 2차 감염 우려

입력 : 2020-05-07 07:21 / 수정 : 2020-05-07 08:43



"[단독]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국민일보>, 2020. 5. 7.

- 이태원은 외국인과 성소수자들이 다수 거주

-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은 성소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 '게이클럽'을 강조하는 언론 보도
- 성소수자 업소에 대한 자극적 보도

배경 – 성소수자 혐오와 낙인

[단독] 게이클럽 확진 나오자 퀴어 수소문한 인천시

▲ 조연주 기자 | ○ 입력 2020.05.07 16:59 | ○ 수정 2020.05.07 18:06 | 댓글 0



“수소문한 행동 자체가 사실상 ‘아웃팅’”
인천시, “방역 차원차 확인했을 뿐”

[인천투데이 조연주 기자] 인천시가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으니 성소수자들은 검사 받는 게 좋겠다”라며 성소수자 단체를 수소문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서울 이태원 게이클럽에 다녀간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인천시 방역당국은 인천의 성소수자에게 검사를 권하기 위해 관련단체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게이클럽 확진 나오자 퀴어 수소문한 인천시”, <인천투데이>, 2020. 5. 7.

•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대응

- 성소수자들의 명단 확보 시도
- 인권보호보다 처벌을 강조



• 지나친 동선 공개로 아우팅 우려

- 확진자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공개
- 언론 등에 의해 직장명까지 공개됨

• 성소수자 커뮤니티 크게 위축됨

• 해당 클럽에 대한 증오범죄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결성

- 성소수자 인권단체 / HIV 감염인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대응 논의
-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검진홍보 및 독려, 방역당국과의 직접 소통, 언론 대응 등의 활동
- 성소수자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안심하고 검진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



대책본부 활동 – 인권침해 상담

- 각 단체별로 성소수자 상담창구 운영
 - 상담안내 카드뉴스 배포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90여건의 전화 상담 접수
 - 검진 사실이 직장에 누설된 사례
 - HIV 감염 사실이 유포된 사례
 - 자가격리로 인한 어려움 등
- => 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와 연계하여 대응



대책본부 활동 – 방역당국과 소통

• 서울시

- 이태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HIV 감염여부를 묻도록 지침이 내려와 시정
- 동선 공개, 재난문자에서 과도한 정보를 담지 않도록 지침 하달
- 이름, 주소 등을 남기지 않고 익명검사 실시, 이후 전국으로 확대
- 서울시 인권센터와 연계, 인권침해 대응 핫라인 개설, 검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을 한 사례, 동선공개 관련 진정 제기함

• 경기도

- 동선 공개, 재난문자에서 과도한 정보를 담지 않도록 공문 발송
- 도지사 공식 브리핑 시 인권침해 예방, 차별반대 메시지를 내도록 함

대책본부 활동 – 방역당국과 소통

• 중앙방역대책본부

- 역학조사 및 동선 공개 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 미등록이주민, HIV 감염인의 의료지원에 대한 논의

5월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의 동선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전파 차단을 위한 목적 외 불필요한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확진자 동선공개 시 방역적인 목적과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를 모두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반복 대량 노출'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일괄 공개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와 관련해서는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 포함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방안을 보완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성별, 나이, 거주지, 직장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방역목적 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지자체에 공개원칙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대책본부 활동 – 커뮤니티 대상 홍보

- 익명검사 확대 등의 정보를 알리고 검진을 독려
- 코로나19, 검진 및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카페들에 지속적인 홍보



4/24-5/6 이태원지역 방문자 익명검사 전국 확대
우리 지금 바로 검진받자
나와 커뮤니티를 지켜요

대책본부 활동 – 언론 대응

- 일부 언론의 지속적인 성소수자 혐오 선동
- 성소수자 업소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 확진자의 직장명 등에 대한 공개

매체명	보도일	기사제목
국민일보	2020. 5. 7.	[단독]이태원 유명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국민일보	2020. 5. 9.	"결국 터졌다"… 동성애자 제일 우려하던 '찜방'서 확진자 나와
머니투데이	2020. 5. 12.	커튼만 쳐진 컴컴한 방, 5년전 차마 못쓴 블랙수면방 취재기
뉴시스	2020. 5. 14.	이태원발 코로나19 검사자 에이즈환자 소문 '뒤숭숭'…충북도 "확인 안돼"
뉴시스	2020. 5. 20.	성소수자 커뮤니티, 여전한 즉석만남..."자제해야"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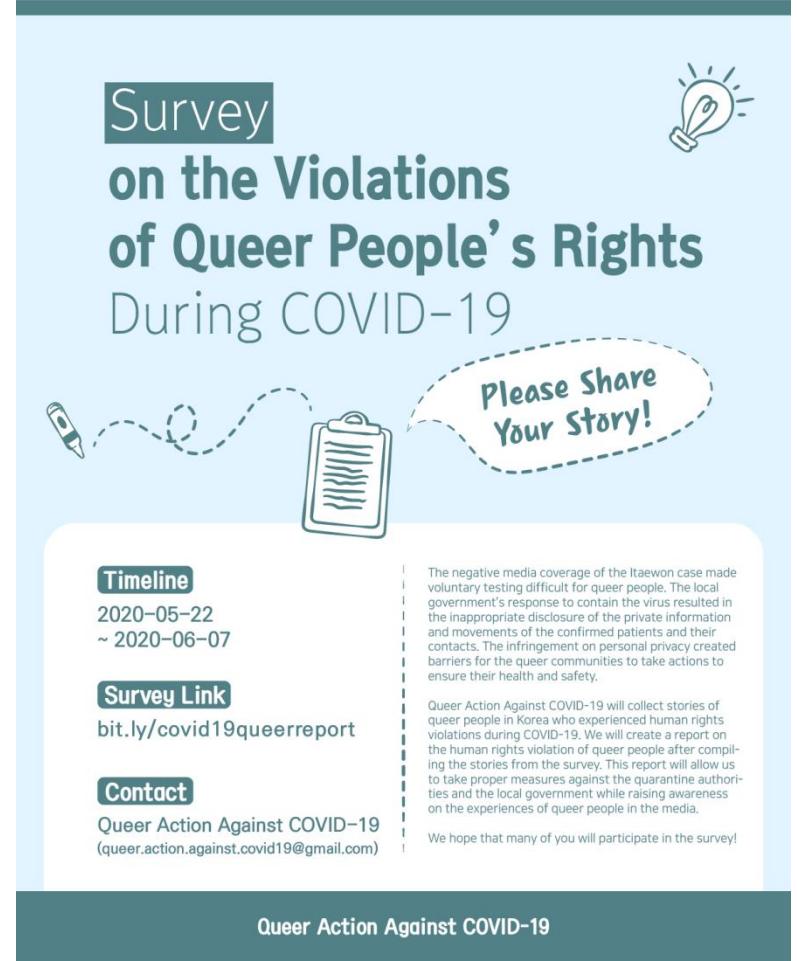
대책본부 활동 – 언론 대응

- 지속적인 혐오 선동 보도를 한 언론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 진행
-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청원
=> 6. 8. 차별금지 조항 위반으로 70여건의 시정권고 이루어짐



대책본부 활동 – 현재

- 이태원 지역 집단 감염은 진정 추세, 다른 시설,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
- 확진자, 자가격리자들이 직장, 학교에 복귀하며 혐오와 차별을 마주함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혐오가 강해짐
- 긴급한 현장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함
-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 수집, 간담회 추진



The poster features a lightbulb icon in the top right corner. Below it, the text reads: "Survey on the Violations of Queer People's Rights During COVID-19". A dashed line leads from a pen icon to a clipboard icon. A speech bubble says "Please Share Your Story!". At the bottom, there is a timeline, survey link, contact information, and a note about the purpose of the survey.

Survey on the Violations of Queer People's Rights During COVID-19

Timeline
2020-05-22 ~ 2020-06-07

Survey Link
bit.ly/covid19queerreport

Contact
Queer Action Against COVID-19
(queer.action.against.covid19@gmail.com)

The negative media coverage of the Itaewon case made voluntary testing difficult for queer people.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 to contain the virus resulted in the inappropriate disclosure of the private information and movements of the confirmed patients and their contacts. The infringement on personal privacy created barriers for the queer communities to take actions to ensure their health and safety.

Queer Action Against COVID-19 will collect stories of queer people in Korea who experienced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COVID-19. We will create a report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of queer people after compiling the stories from the survey. This report will allow us to take proper measures against the quarantine authorities and the local government while raising awareness on the experiences of queer people in the media.

We hope that many of you will participate in the survey!

Queer Action Against COVID-19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 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응하고자 결성된 인권단체 연대체
-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작성
- 영문 번역하여 유엔에 전달 예정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코로나19와 성소수자

- ☑ 성소수자의 구체적 삶을 고려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메시지를 내고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 의료인력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 동성커플이 의료, 돌봄 등에서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 마스크 공급 등에 있어 이분법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권에 기반한 대응 활동

- HIV 감염인 인권운동의 경험
 - 동선공개의 위험성, 감염인에 대한 낙인이 갖는 효과
- 인권을 보장해야 원활한 검진 및 예방도 가능함을 강조
- 정부, 지방자체단체의 성소수자 차별반대 메시지 이끌어냄
 - 코로나19 상황을 넘어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도록 하는 것이 관건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위원회와의 연계

유럽 시민단체에 질문

- 유럽에서는 동선공개 등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가 없었는지?
- 유럽의 성소수자들은 코로나19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 인권과 방역정책 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는지?